

December 13, 2019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13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12. 5. ~ 12. 11.)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주에는 “주요부처 2020년 확정 예산안” 및 “2019. 12. 10. 제37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주요 법안”, 다음 주 국회에서 예정된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을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식약처] 맞춤형·특수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 발표

2019. 11. 28. 특허청과 ‘지역 중소 벤처기업 지식재산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주된 내용은 ① 혁신기업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0억원 수준의 모험자본 공급, ②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부실시 은행권이 이를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청 주도의 회수지원기구 설치 추진, ③ 기계, 재고자산 등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금융위 주도로 설치 등이 있음

[\[참고자료\] 맞춤형·특수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



[금융위] 부동산PF 익스포저 관련 추진 과제 발표

2019. 12. 5. ‘제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부동산PF 채무보증, 대출 관련 건전성 강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함. 주된 내용으로는 ①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 ② 여전사의 PF 채무보증에 대하여 총당금 적립 실시, ③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및 ‘유동성관리기준’ 신설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참고자료\]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



[과기부] 2020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관련

2019. 12. 9. 내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지능정보 기술별 동향 및 확산전략을 논의하는 ‘2020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가 개최됨. ① 2020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규모는 2,659 억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② 2020년 국가정보화에 5조 1,6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③ 국가정보화 예산 중 지능정보기술 투자 비중을 2022년까지 35%로 확대할 예정 등을 밝힘

[\[참고자료\] 2020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기재부1]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발표

2019. 12. 6. ‘바이오산업 혁신 TF’ 2차 회의 및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바이오 정책에 대해 논의함. R&D 혁신, 인재양성, 제도 규제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향후 획기적인 인센티브, 대폭적인 규제개선등을 할 예정임. 특히 LMO 분야의 수입절차 실험승인 관련 행정 간소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유전정보 임상정보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임

[\[참고자료\] 바이오산업 혁신 2차회의 보도자료](#)



[기재부2] 주요 민간투자사업(안) 확정

2019. 12. 10.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안건을 의결함. ① 천안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의결로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천안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를, ②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의결로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을 위한 친환경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③ 천안논산 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안) 의결로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를, ④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의결로 2020년 상반기 협상대상자 지정을 할 예정임

[\[참고자료\]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기재부3]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2019. 12. 11. 내년부터 시행될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②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③ 2020년 1월 중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예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보도자료](#)



[\[참고자료\] 주52시간제 보완대책](#)



[기재부4] 제조업, 국내 관광 산업 등 2020년 예산 확대 추진 예정

2019. 12. 13. 임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분야(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에 30억원을, 자동차 산업 분야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139억원 등) 및 국내 관광 산업(평화테마파크 조성 26.6억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한 23억원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계획을 의결 예정임

[\[참고자료\] 2020년 예산 국회확정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분야 혁신성장 지원전략 발표

2019. 12. 11.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분야 중소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BIG 3 분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함.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① 글로벌 반도체 설계기업과의 협업 및 국내기업의 파운드리 지원 연계, ② 강원 대구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③ 민간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촉진 및 역량있는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해커톤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BIG 3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 주요부처 2020년 확정 예산안

부처명	2020년 예산	'19대비 증감률	주요 예정 집행 내용
교육부	77조 3,871억 원	3.3% 증가	-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 3,840억원 -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3,689억원 등
과기부	16.31조원	18% 증가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626억원 - 혁신도전 프로젝트 및 G-First 사업: 58억원 등
국방부	50조 1,527억원	7.4% 증가	- 사이버 감시정찰 작전체계 등 사이버 작전제 요소: 283억원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980억원 등
행안부	55조 5,471억원	0.2% 감소	-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 89억원 -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3억원 등
문체부	6조 4,803억원	9.4% 증가	-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870억원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323억원 등
산자부	9조 4,367억원	23% 증가	-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 1조 2,780억원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억원 등
보건 복지부	82조5269억 원	13.8% 증가	-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56억원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91억원 등
환경부	9조 5,394억 원	21.5% 증가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800,180억원 - CO2 저장 환경관리기술 개발: 1,165억원 등
고용 노동부	30조 5,139억원	14.2% 증가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46억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2,297억원 등
국토부	50.1조원	16.0% 증가	- 새만금국제공항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요 인프라 확충 지원: 92,319억원 - 도시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 9,418억원 등

해수부	5조 6,029억 원	8.2% 증가	- 해양수산 스마트화 및 신산업 육성: 59억원 - 새만금신항: 69억원 등
중소기업 벤처부	13조4천억원	30.2% 증가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65억원 -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 47억원 등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국가 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접근하여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파차단장치(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하기 위하여 전파를 차단 또는 방해하도록 설계된 설비)를 이용하여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을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혼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과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전면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근로제 개선 등 정책보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중소기업까지 바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적용에 들어갈 경우 일자리 축소와 범죄자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7월 1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늦춰 같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제2항, 제3항 및 제2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시하여 소비자가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의 원재료, 상품의 제조국 같은 사항들도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보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중요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품의 원재료, 상품 등의 환불 기준, 상품의 제조국 등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과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되는 실정임. 따라서 금전보상명령 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독일과 영국 등 외국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근속 기간, 연령 등에 따라 금전보상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금전보상제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의사에 우선해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0조)

3. 제37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2019. 12. 10. 제37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는 총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는바, 아래에서는 위 법률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한 주요 법안을 소개 드립니다.

[제37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법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파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등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 등 손금 익금 산입제도 변경, 합병 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 상향,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 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 범위 조정 등	

4. 주요 국회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

개최일시	토론회명	개최의원	장소
12.16. 10:00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방안 토론회	노웅래(민) 과방위원장	회관 제1소회의실
12.19. 14:30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본 인터넷 선거광고, 이대로 괜찮은가	이채익(한)	회관 제3간담회실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관 및 PR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법적 자문 및 이에 수반된 다양한 정책적 자문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종합적·전략적·실용적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